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매출·수익↓ 인건비·근로시간↑… 자영업자의 '4중고'

자영업자 61% "인건비 늘었다"
53% 매출 줄고 64% 수익 줄어
체감 임금인상률은 45.9% 달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수익이 준 반면, 인건비와 근로시간은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지난달 23일~31일까지 자영업자 208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4중고(매출·수익 감소, 인건비·근로시간 증가)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4중고는 인건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에서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올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수에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변함없다'(50%)와 '줄었다'(48%)가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하지만 응답자의 61%는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인건비가 전년보다 줄거나(20%), 같다(19%)는 비율의 합보다 1.5배나 높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다.

인건비 상승은 자연스럽게 매출과 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매출과 수익이 늘었다는 경우는 각각 6%, 4%에 불과했다.

인건비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직접근로도 높였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점주)가 직접 근로하는 경우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76%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변함없다'(20%), '전년보다 줄었다'(4%)는 소수였다.

설문에 응한 자영업자 64%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지만, '실제로는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45.9%에 달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약 3배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하게 실제 올랐다'는 응답은 22%,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오른 듯 하다'는 14%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 업종 종사 비율이 많았다. 운영형태는 대체로 ▲자영업 일반(63%)이었고, ▲프랜차이즈(20%)와 소상공인(13%)도 포함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소득불평등 악화 '부익부 빈익빈' 심화

소득불평등의 추이·특징

1분기 가계 시장소득 증가율 7.7%
하위 20% -8.5%·상위 20% 12.2%

올해 1/4분기 소득불평등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불평등 완화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6p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7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된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소득계층별 증가율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고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경우 소득불평등은 심해지고, 반대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실제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7.7%였지만 최하위 20% 가구, 즉 1/5분위는 -8.5%였고, 반대로 상위 20% 가구인 5/5분위의 증가율은 12.2%였다.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 비율이 21.2%로 전년동기 대비 35.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한 가구주 가운데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47%나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취업가구주 비율 감소에도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씩 증가했다.

이처럼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하위 소득분위와 상위 소득분위에서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가구 구성과 관련된 특징이 크게 변화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취업률이 1/5분위와 5/5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지니는 가구의 소득변화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기보다는 특정한 소득계층(특히 하위 소득분위)을 구성하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이 전년 같은 시점에 비해 나빠졌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 요인의 변화와 가구특성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며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北 "종전선언 해야" 美 "비핵화가 우선"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 이어져
文 대통령의 8·15 메시지에 주목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엔 비핵화 속도를, 미국엔 북한의 요구에 맞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로 다가온 8·15 광복절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 소강상태에 들어간 한반도의 분위기를 반전시킬까 주목된다.

미국 인터넷매체인 '복스'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측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 ▲북한은 6~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두 달간 여러 차례 이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매번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과 시점이 포함된 미국 측의 공식 비핵화 시간표 내용이 보도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북한에 빠른 속도의 비핵화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외에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복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처럼 북한에 대해 빠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에 우선 집중하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끝장나면 신뢰 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신문은 이날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종전선언이 '시대의 요구'이자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북미가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서 아직도 불신과 적대관계를 이어 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태'라며 "이제는 조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화국 정부는 오래전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발기하였다"며 이는 "쌍방이 다 같이 움직여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9일 이틀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휴가에서 돌아온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주 예정된 제73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잠시 멈춘듯한 비핵화·종전선언 시계를 다시 돌릴지가 관심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불법건축물 존재 몰랐다… 철거하고 지분도 포기"

이개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연료 상한 초과분 즉시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 아들의 대기업 특혜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